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3. 1. 27.(금) 14:00	배포 일시	2023. 1. 27.(금)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	책임자	과 장 박상희 (044-203-3920)
		담당자	사무관 계승모 (044-203-3907)

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「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」 개최

-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요금지원 2배 인상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: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1월 27일(금) 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**『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』를 개최**하였다.

* 아파트별 난방방식 비중 : **지역난방 23.5%(2,593천호)**, 가스개별난방 52%(5,750천호), 중앙난방 15.4%(1,697천호), ('21년 국토부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기준)

<『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』 개요 >

◇ **일시/장소** : '23. 1. 27(금) 14:00~15:00 /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(2층)

◇ **참석자** : 산업부 전력정책관, 신산업분산에너지과
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에너지공단, 집단에너지협회, 집단에너지사업자 20개 社

◇ **주요내용** :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원 협조 요청

○ 본 회의는 **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**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**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** 마련되었다.

○ **산업부,** 지역난방공사·집단에너지사업자 등 **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하여,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,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였다.**

□ 취약계층 **난방비 부담 경감**을 위해, **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('23.1~3)으로 두 배 인상하고**,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접근성을 개선**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
<참고>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지원 개요

지원 내용	대상	세대당 지원	총 지원 규모 (약 25만 세대)
기본요금 감면	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	27천원(연간)	45억원
자격별 요금 정액 지원	기초수급자,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	('22 단가) 4천원~10천원 → ('23.1~3, 한시 단가) **8천원 ~ 20천원**	('22년도) 41억원 **→('23년도) 52억원**

○ **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**으로, **249,760 세대** 대상 총 **86억원을 지원*** 하였으며, **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* 21년도 대비 지원세대 14,917세대, 지원금액 3.25억원 증가

○ **집단에너지협회**는 **사업자들이 출연**하여 조성되고 있는 가칭 **"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***"** 을 에너지 **취약계층을 대상**으로 **지원**해 나갈 **방안을 마련 중**이라고 밝혔다.

* 총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

□ 또한, **가구별 난방효율 향상**을 통해, 과다한 **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** 및 개별 **세대별 컨설팅**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.

○ 고객센터*(콜센터) **인력 충원**, **홈페이지 팝업 안내** 등을 통한 난방비 **절감 방법 안내** 등을 통해 **홍보를 강화**하는 한편,

*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, 1688-2488

○ 20년 이상된 **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**에 대해 2주간(1/27~2/10) **현장 방문**을 통해 **에너지 효율 개선** 및 **난방비 절약 방안**에 대한 **컨설팅*을 집중 시행**할 예정이다.

* 한국지역난방공사 시행(1.27~)

□ **이호현 전력정책관**은 **기온 하락**, **LNG가격 인상**에 따라 **난방비 급등**으로 인해 **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**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,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,

○ 회의에 참석한 **민간 사업자**들도 최근 **난방비 인상**에 따른 **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**하면서, **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**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